



# 일본기업 REACH 대응 설문조사

Results of questionnaire on Japanese companies' response to REACH

REACH 기업지원센터 자료 제공

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REACH(新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다음달인 6월 발효된다. 이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 수출길이 막히게 돼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ACH가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히는 이유는 규제 대상의 광범위성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물론 전자,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도 모두 등록 대상으로 총 3만종이 넘는다는 게 EU 화학물질관리청의 추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REACH가 EU 수출에 있어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EACH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EU에 수출하고 있는 3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률은 127개(회수율 4%)밖에 안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117개 중소기업 중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36%나 됐다.

본 고에서는 일본기업 REACH 대응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국내 인지도와 비교해 봄과 동시에 REACH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본다.

- 편집자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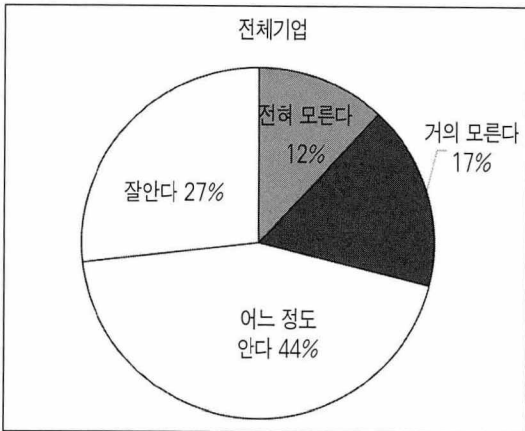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일본 환경성은 REACH 대응과 관련하여 772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총 772개 업체 가운데, 응답기업수는 3백95개로 나타났으며, 회신율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REACH가 도입된 것을 알고 있는냐는 물음에는 응답기업의 71%가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대기업의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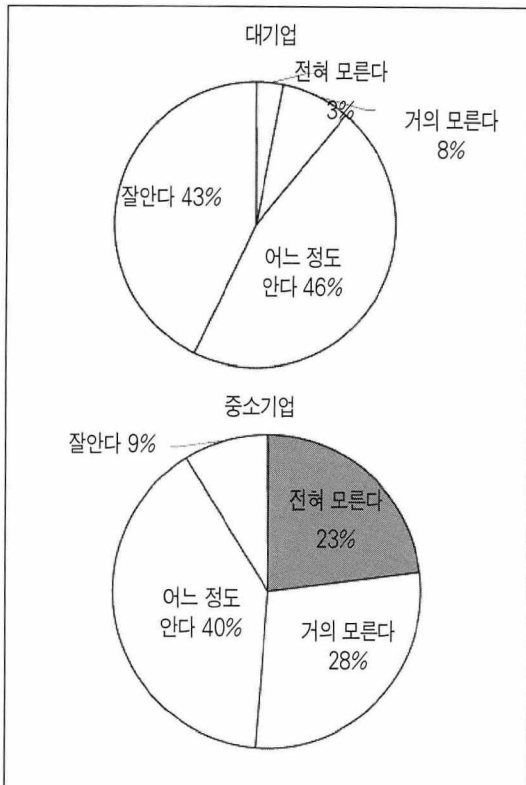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48%가 REACH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REACH 인지도는 유통기업, 화학물질, 조제, 제조기업, 완제품 제조기업, 부품제조 기업순으로 높았다.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업자마다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하는 물음에는 대기업의 38%가 잘 안다고 대답한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단 7%만이 알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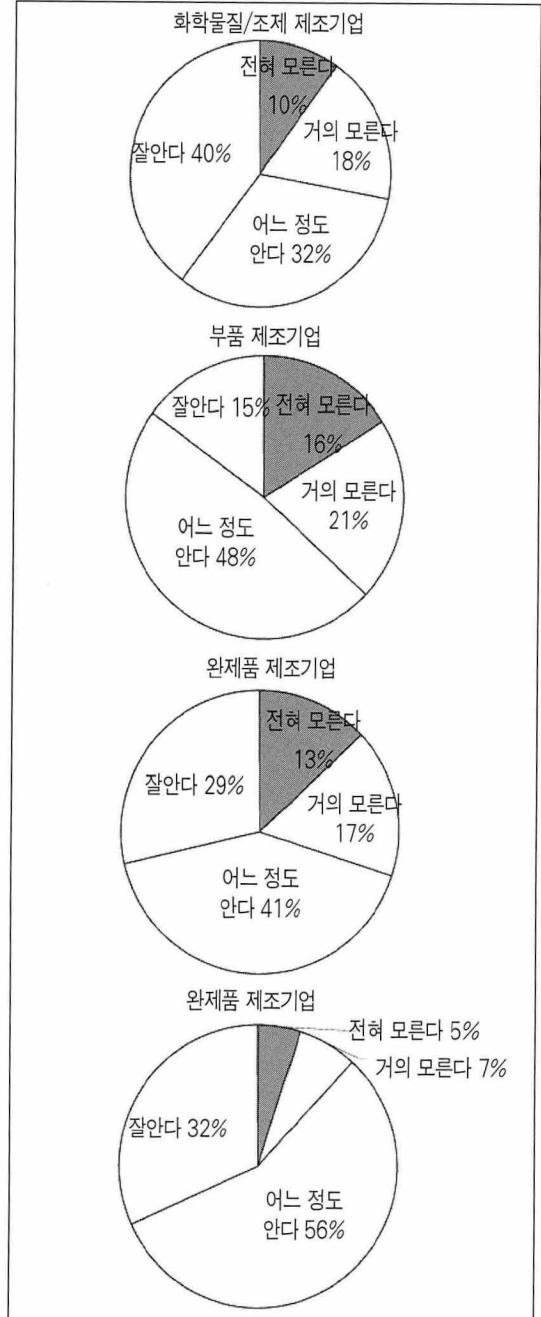
[그림 1] 유럽에서 REACH가 도입된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림 2] 유럽에서 REACH가 도입된 것을 알고 있는가?(대, 중소기업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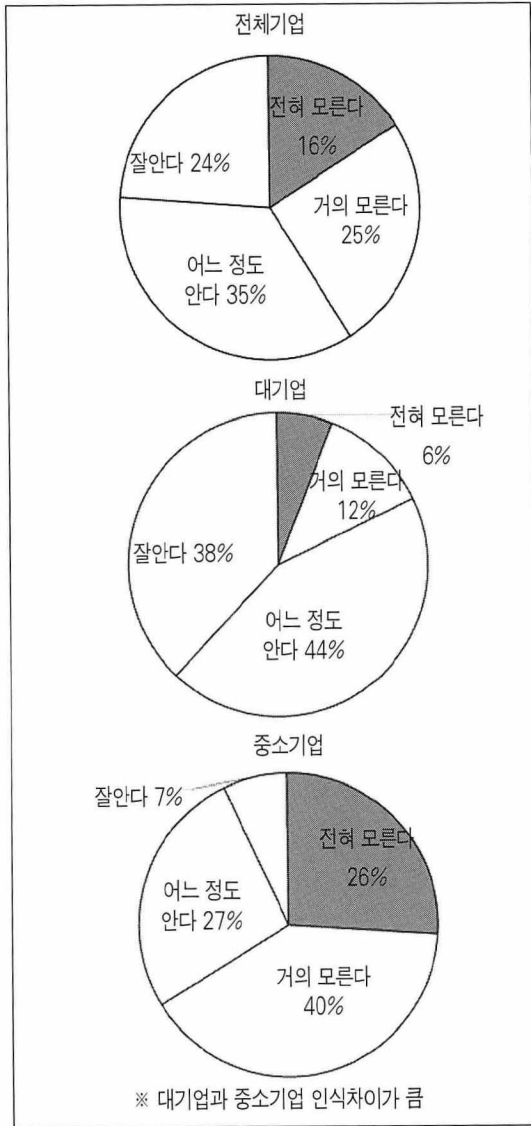


[그림 3] 유럽에서 REACH가 도입된 것을 알고 있는가?(사업자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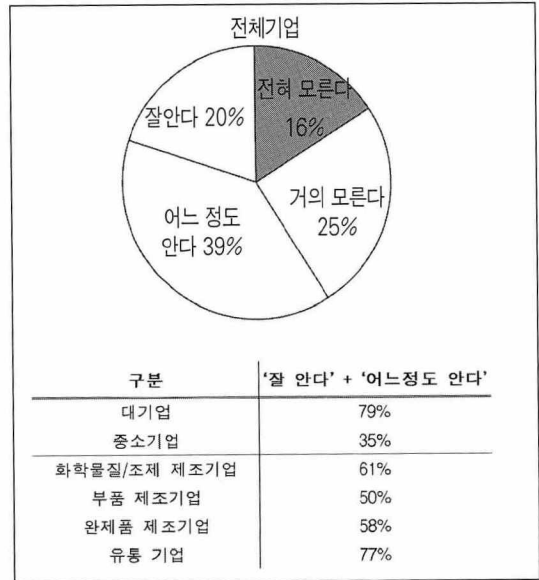


[그림 4]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업자마다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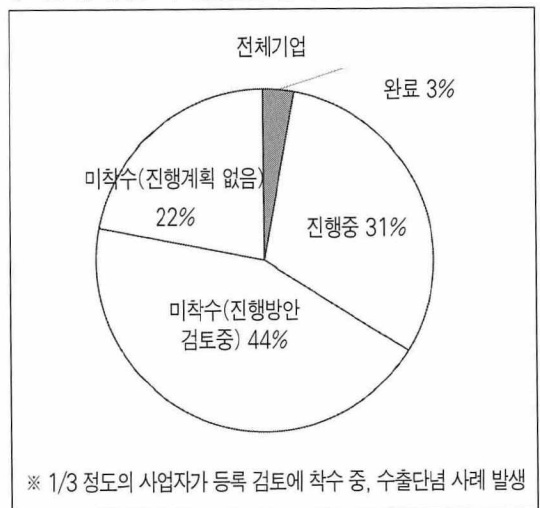


유럽화학물질청 등록에 대한 검토상황에 있어서도 1/3 정도의 사업자가 등록 검토에 착수 중 수출 단념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데이터 수집비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그림 5] 사업자가 위험평가를 수행하여 위험 관리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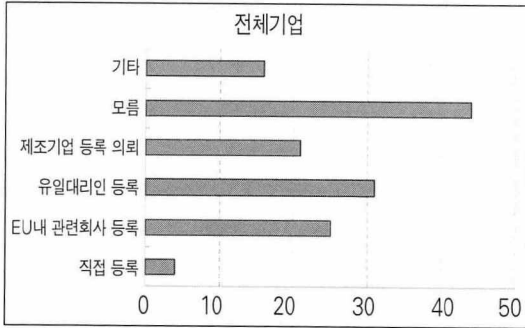


[그림 6] 유럽 화학물질청 등록에 대한 검토 상황



인지도는 높지만 중소기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기업의 70% 이상도 REACH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림 7] 어떻게 등록할 예정입니까?(복수응답)



REACH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조사에서는 REACH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37%)를 하는 기업이 부정적평가(34%) 보다 높았으며 REACH 시행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취급제품이 감소하고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도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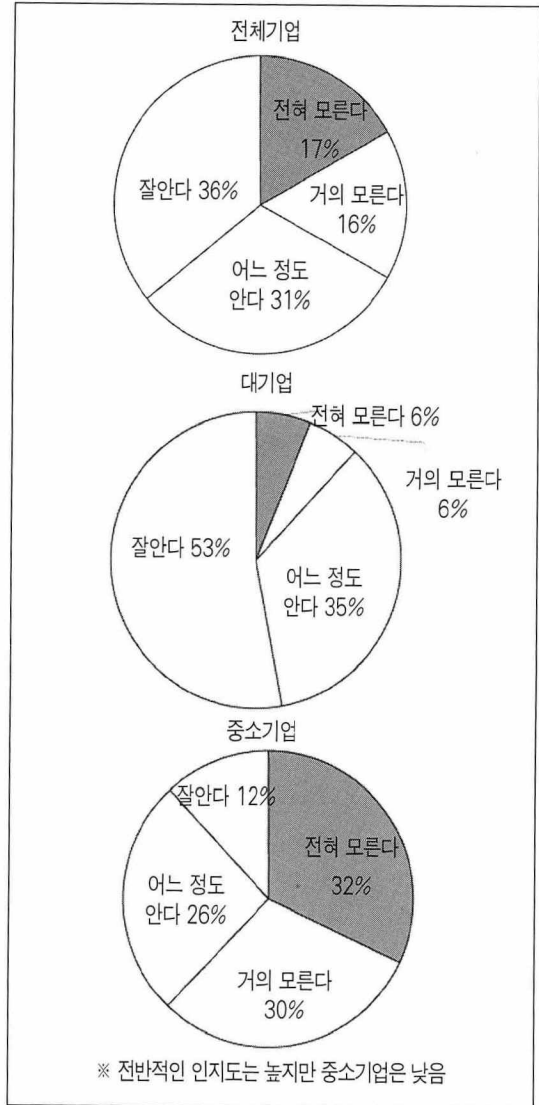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국내 상황과 마찬가지로 REACH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는 인식하지만, 마땅한 대응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국내 기업들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은 발효 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 6~11월 사이에 실시되는 '사전 등록'이다.

EU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기간 중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EU 화학물질청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음달 6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리치)가 발효됨에 따라 전자 화학 자동차 등 주력수출 산업이 적지 않은

[그림 8] 데이터 수집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동부담인 것을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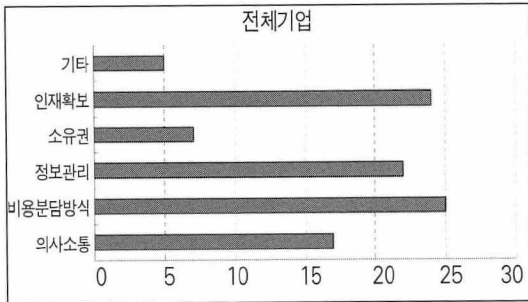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EU 리치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제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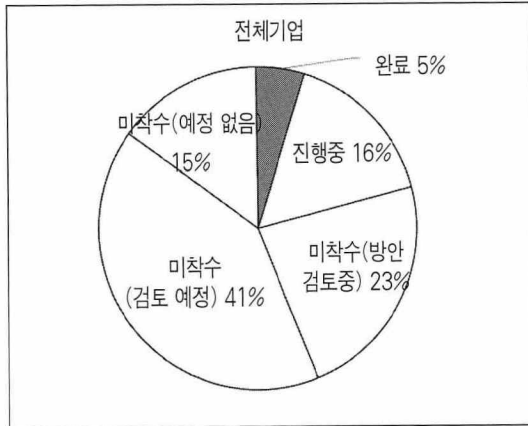
리치는 EU에 들어오는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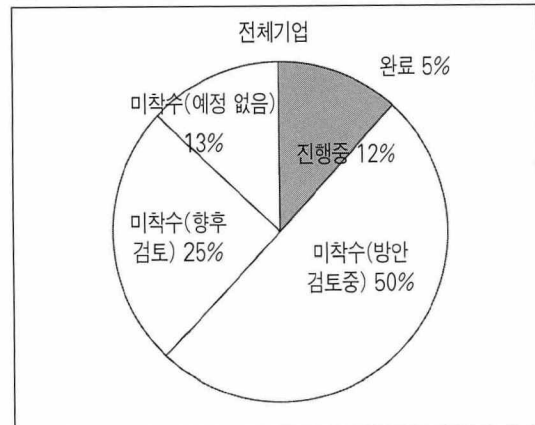
[그림 9] 데이터 공동수집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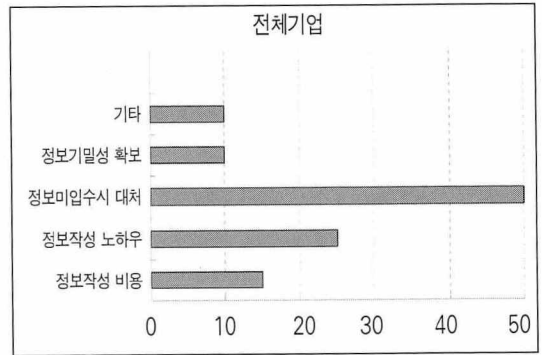
[그림 10] 제품에서 화학물질의 의도적 배출을 파악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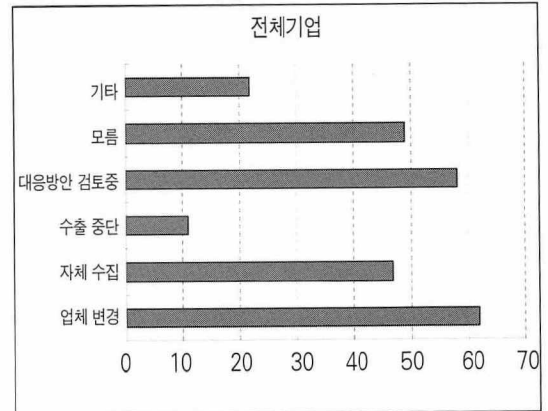
[그림 11] 제품중의 '고우려 물질'에 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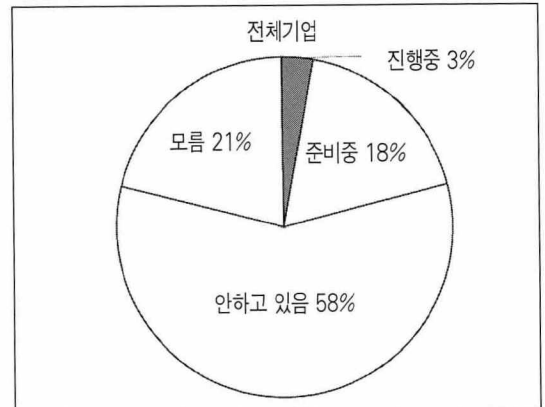
[그림 12] 데이터 공동수집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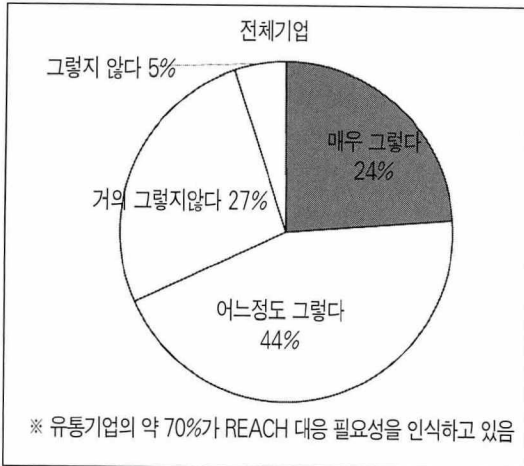
[그림 13] 완제품 제조업자가 자료 미제공시 자료 수집방법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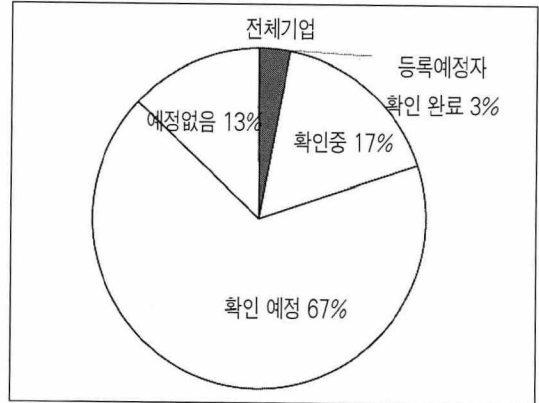
[그림 14] EU 수출시 화학물질 자료를 납입처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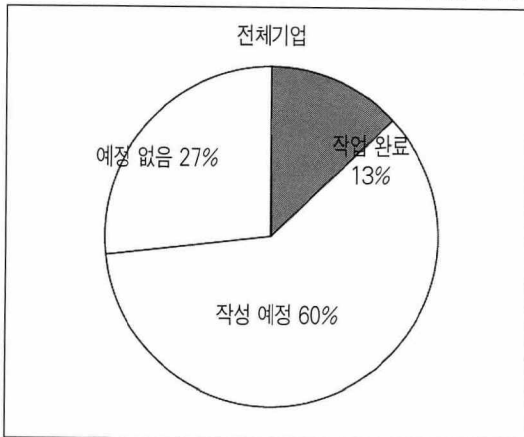
(그림 15) 유통기업도 REACH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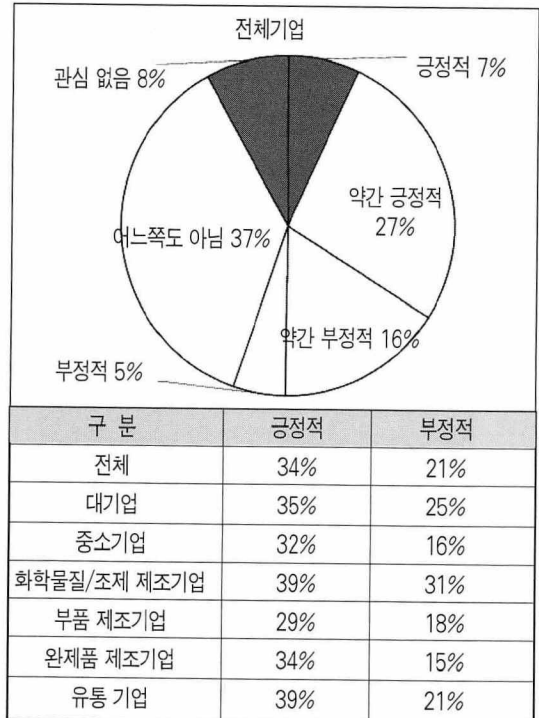
(그림 17) 제품의 화학물질을 어떻게 등록할 예정인가(등록자예정자 확인)?



(그림 16) EU 수출 제품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가?



(그림 18) 귀사에서 REACH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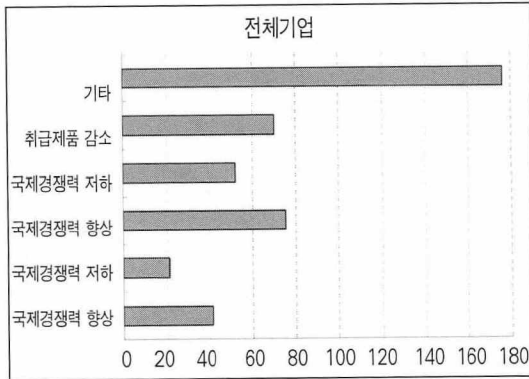


화학물질과 자동차 등 완제품에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EU화학물질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따라서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미리 EU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다. 사전등록을 하더라도 유해물질로 평가되면 해당 물질을 수출할 수 없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제품환경 규제는 이미 심각한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



[그림 19] REACH시행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복수응답)



[표 1] 설문조사 발송 및 응답 기업 수

구분	발송 기업수(개)	응답 기업수(개)	회상율(%)
제조업	683	345	50.5
유통업	89	44	49.4
기타		6	
합계	772	395	

[표 2] 혁신 기업 분류

구분	대기업(개)	중소기업(개)	합계(개)	
제조업	화학물질	44	59	103
	부품	70	61	131
	최종제품	73	41	114
유통업	21	23	44	
기타	1	2	3	
합계	209	186	395	

규제의 내용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고,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EU만 하더라도 리치에 앞서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등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유사한 제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어 이미 환경규제는 전지구적 이슈로 부상했다.

게다가 EU는 내년 하반기에 리치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인 친환경설계의무화(EuP)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EuP는 제품설계 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하니 리치보다 더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할 뿐 아니라 관심도 부족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지난 17일에는 환경부 산자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리치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이 인력 및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처럼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예견되고 있다.

가뜩이나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달 27~28일 환경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 상월곡동 KIST에서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을 연다. 국내 중소기업 역시 REACH 관련 행사에 참가해 적정한 대응을 마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